

1.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②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 ③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은 입법취지 및 그에 사용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한 대한민국 여권의 최종 사용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선거와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회석과 비례대표의석을 구분한 가운데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선거를 각기 치르는 방식이다.
- ②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③ 대선거소수대표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물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는 등 장점을 가지며, 선거의 대표성이나 평등선거의 원칙 측면에서도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반드시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도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3.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입법자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당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2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4.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그 모금방법 또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나, 모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그 부담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에는 모금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율은 근거법률에 유보되지 않아도 된다.
- ② 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로서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더라도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제9조)에 부합한다.
- ③ 「의료법」 상 한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하였다고 하여 한약업사의 한약판매행위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

5.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교육감은 교육감선거에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에 대하여만 입후보 시 사직의무를 부여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유공자에게 입양된 양자가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양자 상호간의 희생분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검사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영장주의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사전적·사법적 억제통제 통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과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 즉, 전자는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후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④ 현행법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

7.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0조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②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관적·내면적·정신적 사항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약한 것이므로 법적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영역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8.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收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 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평등위반심사를 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할 경우로서, 첫째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 둘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9.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에 의해 회복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은 판결을 선고 받을 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범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를 정한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구금 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서 수형자의 도주를 예방하고 법정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하더라도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통제의 모습이나 수준은 강제처분의 목적과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강제처분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수형인 등에 관한 부분’은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성명, 직명(職名)과 같이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되고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기초정보들은 다른 위험스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識別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 데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역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검색·회보 사유의 필요성이 있고, 검색·회보 사유가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 ③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의 업무가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12.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점차 국가배상청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②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에 대해 위법한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한 광범하게 제거할 것과 위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손해보전을 행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법치국가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 ③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에 따라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그 영업주에게 형벌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3. 기본권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③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같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인간의 권리’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14. 명확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인 구 「보호사법」 제91조 제1호 중 “업으로” 부분은 법 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② 범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범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③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④ 명확성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범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정도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15.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 ③ 전쟁 또는 테러 위협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헌법 제14조가 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이 자기 원하는 곳에 체류지와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일단 정한 체류지와 거주지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지 아니할 자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6.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인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험시행공고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도 필요한데,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는 것은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17. 형벌불소급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연장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③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 ④ 형벌불소급원칙은 범죄행위시의 법률보다 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높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주형을 가중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부가형·병과형을 가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조항은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
- ③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동일하지 아니한데,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 ④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19.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 쪽 차로만으로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중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사건 해결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구 「변호사법」 조항은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③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을 의미하고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1.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가.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고,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면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나.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였고, 대통령의 궐위 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규정을 도입하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 라.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 모두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변경 또는 소속정당 해산의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였다.
- 마.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 및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확정권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부여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다.
-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이었으나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이었다.
-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었다.
- ④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23.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된다.
- ②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한다.
- ③ 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 국민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이 바로 전체 국민의 의사인양 법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
- ④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도 있어서 해석 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24. 헌법의 수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저항권이 헌법이나 실정법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회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저항권의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 ③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 ④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파악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일지라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부득이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5. 환경권 및 환경보전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의 성격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하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 ④ 환경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는 소유자 역시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6.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을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있다.
-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 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청구인에게 화장품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다.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 중 ‘교원, 사립학교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 ③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채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채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9. 근로의 권리 및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 조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③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상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30.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상 금혼조항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근친의 범위를 한정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 ②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출생 후 곧바로’ 등록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③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1. 대체복무요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체복무에는 군사적 의무와 관련한 것이 모두 제외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등급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한 것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벌적 처우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 ③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 ④ 군사적 의무가 완전히 배제되고 전시에 병력동원에서 배제되는 대체역과 그렇지 아니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그 복무기간 등에 일정한 차이를 둔다면 그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편입된 대체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

3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조항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위협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상 조항 중 해당 부분(확성장치 사용금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상 조항 중 해당 부분(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 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서 표현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게시판에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해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33.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 해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만 규제하고 구호나 함성 또는 노래나 박수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신고된 모든 옥외집회의 개최가 법률적 근거 없이 불허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34.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정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③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해당 조항은 판사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단 법조경력요건을 충족하여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판사임용자격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판사임용자격에 지나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해당 조항은 기탁금액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여 후보자로서의 성실성을 갖춘 사람도 출마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5.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 건국(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가운데 해당 부분은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교육을 강제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인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 ②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는 학교교육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
- ③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또는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 ④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과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에 대해 재심을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 보호자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②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금지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군인 등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고,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등이나 그 유족이 실제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그 권리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7.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된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의제만 논의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청원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청원권을 침해한다.

3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규정은 위 행정기관의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시험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응시자에 대하여 다음날 시험을 별도로시험장·별도시험실에서 비대면 평가로 응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의제기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 ④ 법무부장관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9.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②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 ④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40.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서버 이름 표시(“SNI”)를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②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받는 제약은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자신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대응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